배출권거래제 즉각 수용하라!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린산업 육성을 목표로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산업계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조치라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제조코스트가 1-2% 상승해 국제경쟁력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절대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보고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 도입하면 제조코스트가 최대 1.27% 상승함은 물론 국내총생산(GDP)이 0.58%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KIET는 배출권 50% 유상배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이면 제조코스트가 1.27%, 10%이면 1.03%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코스트가 1%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어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시멘트, 비금속광물, 철강은 제조코스트가 4-6% 급상승하고 목재 · 종이, 인쇄 · 출판, 정유, 석유화학, 1차금속도 1-2% 높아지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시멘트 7-9%, 철강 2-3%, 정유 1%, 석유화학 0.8-0.9%로 미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KIET의 분석은 배출권거래제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책임은 무시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은 10위권 안에 포진하고 있는 국가로 에너지 사용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사회적 명제이며 회피해서도 안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들은 최근 들어 수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조코스트 1% 상승은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석유화학 수출이 1-3% 줄어들 것이라며 수출 지상주의 시대의 논리를 펴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 없다.
석유화학은 매년 수출이 20-30%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수출이 1-3% 감소에 그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화학저널 2011/2/21>